

# 주요 업무 보고

2018. 7.

## 민생사법경찰단

# I. 일반 현황

## 1 특별사법경찰 운영개요

### □ 운영목적

-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제도
- 지명 직무범위 내의 범죄행위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 강화 및 법질서 확립 제고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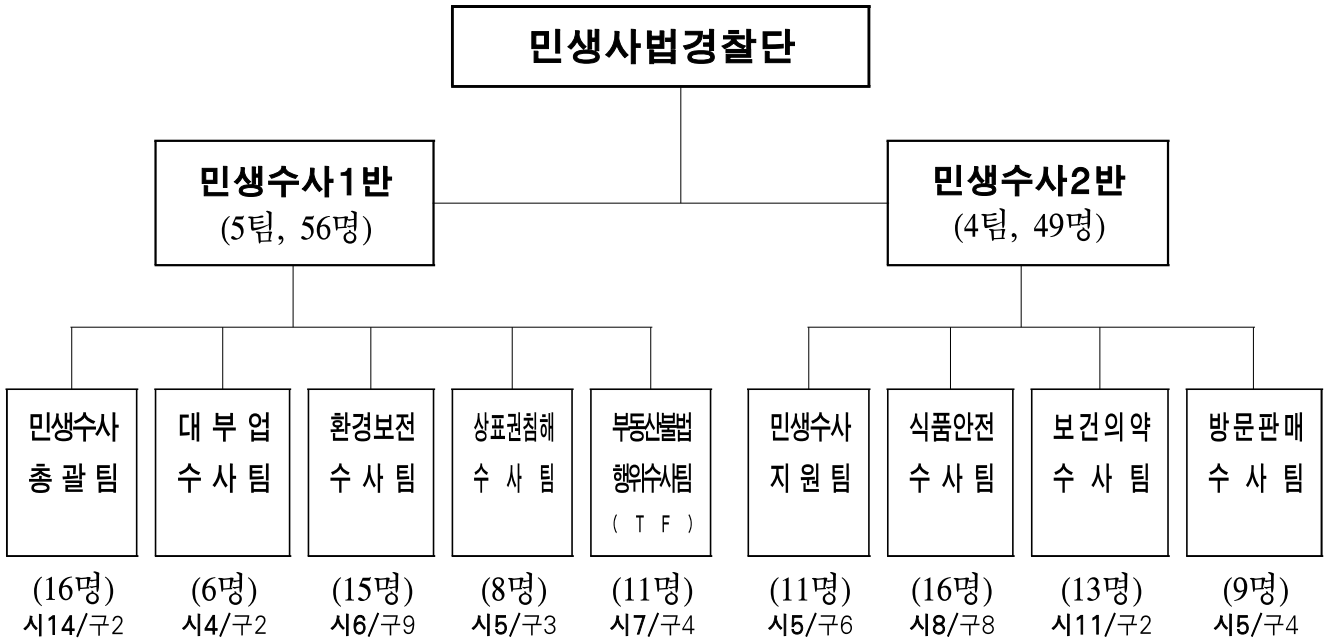
### □ 법적근거

-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소속 관서 장의 제청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제5조)
  - 소속 관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지명 직무에 대한 범죄 수사(제6조)

### □ 민생사법경찰단 설치연혁

- ▶ '04.05.~ : 시·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운영(특사경 직무규칙 제정, '04.4.26.)
- ▶ '08.01.01. : 지자체 최초 수사전담 조직 창설(1과 2팀, 25개 지원반)
  - ※ 특별사법경찰지원과, 82명(시10, 구72)
- ▶ '08.02.21. : 5개 분야 지명(식품, 공중위생, 의약, 환경, 원산지표시)
  - ※ 추가(3개 분야) : 청소년('08.5.27.), 개발제한구역('10.11.22.), 상표('12.4.18.)
- ▶ '08.03.20. : 법률자문검사 파견(부장검사, 법무부에서 파견)
- ▶ '15.08.26. : 4개 분야 지명(대부업·다단계판매, 석유·자동차관리, 화장품, 의료기기)
- ▶ '15.11.12. : '민생사법경찰단' 신설(행정국 내 1단 2반 8팀)
- ▶ '16.02.04. : '민생사법경찰단' '국' 조직 승격(행정1부시장 직속, 1단 2반 8팀)
- ▶ '18.01.18. : 4개 분야 지명(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사회복지시설, 시설물안전, 부동산)

□ 조직 : 1단 2반 9팀



※ 부동산불법행위수사팀(TF팀) : '18.1.18.

□ 인력 : 105명 (시 65명, 자치구 40명)

(단위 : 명)

구분	합계	직급별 인원현황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계 (시+자치구)	105	1	2	13	47	36	6	-
시	소계	1	2	13	28	19	2	-
	수사1반	1	1	4	16	12	2	-
	수사2반	-	1	9	12	7	-	-
자치구	소계	-	-	-	19	17	4	-
	수사1반	-	-	-	8	8	4	-
	수사2반	-	-	-	11	9	-	-

□ 2018년 예산 : 1,637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년	2017년		증감 (A-B)	%
	예산액(A)	예산액(B)	집행액		
<b>총 계</b>	<b>1,637</b>	<b>1,594</b>	<b>1,507</b>	<b>94.5</b>	<b>43</b> <b>2.7</b>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62	62	56	90.3	-
사무관리비	38	38	38	100	-
국외업무여비	15	15	9	6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	9	9	100	-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1,190	1,118	1,074	96.1	72 6.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	6	6	100	-
사무관리비	410	388	388	100	22 5.7
공공운영비	72	66	66	100	6 9.1
국내여비	378	333	309	92.8	45 13.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	19	19	100	2 10.5
특정업무경비	276	288	269	93.4	△12 △4.2
재료비	15	12	11	91.7	3 25
배상금등	2	1	1	100	1 100
자산및물품취득비	9	5	5	100	4 80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249	229	205	89.5	20 8.7
사무관리비	1	-	-	-	1 100
공공운영비	25	-	-	-	25 100
전산개발비	223	-	-	-	223 100
자산및물품취득비	-	229	205	89.5	△229 △100
기 본 경 비	136	185	173	93.5	△49 △26.5
사무관리비	105	96	96	100	8 9.4
국내여비	16	80	68	85	△64 △8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	-	-	-	5 1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	9	9	100	1 11.1

□ 수사반별 업무분야

반 명	팀 명	담당 업무
민생수사1반	민생수사팀	▶ 인사, 조직, 예산, 직무교육, 송치 등 특사경 업무총괄 - 단속·수사 종합계획 수립, 홍보, 제도개선, 사건송치 등
	대부업팀	▶ 불법 대부업 분야 수사 - 불법 대부업 분야 기획·인지 수사 등
	환경보전팀	▶ 환경 분야 수사 -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수사, 가짜 석유제품 불법유통 수사 등
	상표권침해수사팀	▶ 상표권 침해 행위 수사 - 상표·상호 도용,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수사 등
민생수사2반	부동산불법행위수사팀(TF)	▶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수사 등
	민생수사지원팀	▶ 청소년보호분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 수사 - 청소년 유해 매체물·유해 약물, 개발제한구역보호, 긴급안전점검 기피·방해행위 수사 등
	식품안전팀	▶ 식품·원산지표시 분야 수사 - 식품 제조·가공·유통과정 위반, 농수축산물 원산지 위반,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식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위반행위 수사
	보건약팀	▶ 공중위생·의약·화장품·의료기기·의료·정신 분야 수사 - 위생업소 불법행위, 불법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제조·판매사범,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 관련 개인정보 누설행위, 정신건강시설 이용자 보호 관련 수사 등
방문판매팀	▶ 불법 방문·다단계판매 및 할부거래, 사회복지시설 분야 수사 - 불법 다단계판매,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횡령 수사 등	

# '18.5월말 기준 수사실적 : 498건, 599명 입건 (단위 : 건/명)

구분	입건			수사 진행중		검찰 송치										기소율 (A/(A+B))
						계		기소		불기소		이송 등 기타		검찰 처분중		
	건	%	명	건	명	건	명	건	명 (A)	건	명 (B)	건	명	건	명	
합 계	498	100	599	144	183	354	416	69	80	22	26	-	-	263	310	75.5
식품위생	156	31.3	164	27	29	129	135	-	-	-	-	-	-	129	135	-
원산지표시	26	5.2	29	3	5	23	24	-	-	-	-	-	-	23	24	-
의 약	20	4.0	27	12	15	8	12	4	5	-	-	-	-	4	7	100
공중위생	12	2.4	12	5	5	7	7	1	1	1	1	-	-	5	5	50
환 경	42	8.4	67	19	34	23	33	12	13	-	-	-	-	11	20	100
상 표	73	14.7	74	14	14	59	60	18	18	12	12	-	-	29	30	60
개발제한구역	15	3.0	15	3	3	12	12	7	7	1	1	-	-	4	4	87.5
화 장 품	5	1.0	7	0	0	5	7	1	1	-	-	-	-	4	6	100
의료기기	57	11.4	87	10	14	47	73	14	22	6	9	-	-	27	42	71.0
석유및자동차	50	10.0	51	20	21	30	30	10	10	1	1	-	-	19	19	90.9
대부및방문	14	2.8	23	9	10	5	13	2	3	-	-	-	-	3	10	100
부 동 산	28	5.6	43	22	33	6	10	-	-	1	2	-	-	5	8	-

## 세부 직무 범위 : 16개 분야, 71개 법률

지명분야	직무내용	직무관련 법률
대 부 업 및 방 문 판 매	▶대부업·방문판매 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사업 육성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화 장 품	▶안전한 화장품 보급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 (가짜 무등록 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	○ 화장품법
의 료 기 기	▶안전한 의료기기 보급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 (가짜 무등록 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	○ 의료기기법
석유 및 자동차	▶시민의 안전과 환경오염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근절 (가짜석유 유통, 무등록 석유판매, 무등록 불법정비 등)	○ 자동차관리법(무등록 자동차정비업 등)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식 품 위 생	▶부정식품 추방으로 시민체감 먹거리 안전 확보 (식품생산→제조→유통 등 위해여부, 위생관리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식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위반행위 수사 (수입식품 미신고 행위, 고의로 거짓된 시험·검사성적서 발급행위 등)	○ 식품위생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식품위생 범죄)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축산물위생관리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원 산 지 표 시	▶식품·농수산물, 공산품 등 먹거리에 대한 불신 해소 (농·수산물·공산품 원산지허위표시, 인삼·양곡 불법판매 등)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인삼산업법 ○ 양곡관리법 ○ 대외무역법(원산지표시)
공 중 위 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수준 제고 (공중위생업소 미신고 영업행위 및 위생상태 등)	○ 공중위생관리법
의 약	▶가짜 의약품 등으로부터 시민건강 확보 (무자격자 고용 의약품 판매, 의약품 불법유통 등)	○ 약사법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사 범죄)
환 경	▶패악한 도시환경 조성 및 맑은 환경 보전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보전위반행위, 오염도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등)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하수도법 ○ 폐기물관리법 등 32개 법률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청 소 년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탈선예방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 유해업소출입·고용위반 등)	○ 청소년 보호법
개 발 제 한 구 역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차단으로 건전생활공간 조성 (무허가 건축, 공작물 설치행위 등)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표 권 침 해	▶위조상품 제조·판매 근절로 상품신뢰도 제고 (상표권 침해 및 공산품 원산지 표시위반 등)	○ 상표법 ○ 대외무역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의 료 정 신 건 강 시 설	▶의료법 위반행위 근절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 거부행위, 의료기관 시설·위생 기준 위반, 개인정보 누설행위 수사 등) ▶정신건강시설 이용자 보호 (강제 입원행위, 시설 이용자 가혹행위 수사 등)	○ 의료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사 회 복 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 관련 수사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횡령, 기본재산에 대한 무허가 매매 행위 수사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 설 물 안 전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을 통한 재해와 재난 예방 (긴급안전점검 거부 또는 기피·방해행위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 동 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통한 주거안정 도모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뺏다방 단속 등)	○ 주택법 ○ 공인중개사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II. 2018년 성과 목표

비전

시민이 안전한 도시, 정의로운 서울 구현

목표

민생범죄 척결 및 사전 예방으로 민생침해 Zero화

추진방향

- ▶ 시·구 특사경 협력 체계화·역량강화로 광역단위 자치경찰 기반조성
- ▶ 민생수사 분야 확대 및 대 시민 예방홍보 강화

### 수사 전문가 양성 및 과학수사기반 마련으로 수사역량 강화

- 전문관 확대, 검·경 유사분야 경력직 채용(3명), 장기근무(3년) 시행 등
- AI활용 수사 정보체계 구축, 수사자료 전산화 추진
- 검·경 수사시스템, 디지털포렌식센터, ‘대포킬러’ 등 적극 활용

### 민생침해 수사범위 확대·활성화로 민생범죄 척결

- (기존) 불법 대부업·다단계 등 12개 분야(55개 법률)
- (신규) ‘주택법’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4개 분야 16개 법률 추가

### 수사거버넌스 확대 및 민생범죄 신고제도 활성화

- 서울YWCA 등 시민단체 및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 협약 추진
- 시·구 협업체계 구축, 자치구별 민생수사전담팀 신설 권고
- 민생범죄 신고 앱, 포상금 제도 지하철광고, 시·자치구 소식지 등 활용 홍보

###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민생사법경찰상 정립

- 인권침해 발생 사전예방, 사후구제, 인권보호시스템 제도화
- 사건관계인 신분 보호 등 인권존중 수사 환경 구축 및 인권의식 함양

### III. 핵심 사업

---

1. 수사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 및 조직역량 강화
2. 디지털 수사기반 구축을 통한 과학수사 활성화
3. 수사 거버넌스 구축·협력 활성화로 민생범죄 방지
4. 시민과 함께 소통·공감하는 민생범죄 예방 홍보



# 1

## 수사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 및 조직역량 강화

- ◆ 신규전입자 및 기존 직원에 대한 수사교육 강화로 수사관 마인드 제고
- ◆ 수사전문관 확충, 수사관 정원 확대 등으로 조직역량 강화

### □ 그간의 추진내용 및 성과

- 수사관 역량강화 교육 및 신규직원 수사관 전환교육 실시
  - 부동산 등 수사분야별 전문가 초빙 교육 및 법무연수원 등 위탁교육(수시)
  - 기본소양교육 + 심화교육 + 현장교육 시행(매년 초)
  - 전문수사관과 신규 직원 간 멘토·멘티제 운영 : 13개조 26명('18년)
- 수사 전문관 적극 육성 및 외부 전문가 채용
  - 전문관 선정 : 13명, 외부 전문가 채용(5명) : 변호사 4명, 경찰경력직 1명
-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제정 등 인권수사 강화
  - '18.5.3. 시행(서울특별시예규 제721호), 구성체계(4장·68조·부칙)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8.6.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37,940	28,970	28,970	76.4%	76.4%	37,940	100%

### □ 향후 추진계획

- 수사관별 맞춤형·체계적 수사교육 강화로 수사역량 고도화
    - 신규 전입자 : 기초교육+실무교육+현장교육 등 수사관 전환교육 실시
    - 기존 수사관 : 전문기관 위탁교육, 외부전문가 초빙교육 등
    - 인재개발원 '특별사법경찰 전문 교육과정' 신설 운영('19년~)
  - 수사 전문관 확충 및 수사관 정원 확대 등으로 수사전문성 확보
    - 수사전문관 13명 → 25명으로 확충, 금융전문가 임기제(시간선택제) 등 채용
    - 수사분야 증가에 따른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정원 확대 추진
- ※ 수사분야 증가 : '17년(12개 분야, 55개 법률) ⇒ '18년(16개 분야 71개 법률)

- ◆ AI, 빅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정보기술을 활용한 과학 수사시스템 도입기반 마련을 통해 수사성과 제고 및 민생침해 범죄 근절에 기여

### □ 그간의 추진내용 및 성과

-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운영('17.8월~)
  - 검찰, 경찰의 경우 10년 전부터 디지털포렌식 수사 진행 및 전담부서 운영 중
    - \* 스마트폰, PC 등 디지털기기에 기록, 삭제된 정보를 수집·추출·복구 분석으로 범죄의 단서 및 증거를 찾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과학수사기법
  - 전담인력(전산직 2명), 추진실적 : 총 64회, 278개 매체분석('18.6월말 현재)
- 국가 사용 수사시스템 도입으로 수사 효율성 도모('17.1월~)
  - 「디지털증거송부시스템(KD-NET)」 (검찰) : USB, CD 등 저장 검찰 전달 → 온라인 전송
    - ▶ 추진실적 : '17.7월 ~ '18.6월 : 16건, 89개 매체
  - 「수사자료표전산시스템」 (경찰) : 피의자 인적사항 등 작성·등기송부 → 온라인 처리
    - ▶ 추진실적 : '17.1월 ~ '18.6월 : 1,915건
  - 「범죄경력조회시스템」 (경찰) : 경찰서 방문 조회 → 전용단말기 설치, 직접 조회
    - ▶ 추진실적 : '17.4월 ~ '18.6월 : 728건

### □ 향후 추진계획

- 인공지능(AI) 활용 '사이버 수사정보 체계' 구축('18.하반기)
  - 인터넷, SNS 등 사이버 상에 민생침해 관련 정보를 색출 수사정보로 활용
  - ※ 인공지능(AI) 구축사업 : 정보기획관과 협업으로 추진
- 수사업무 전산관리를 위한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 추진('18.하반기)
  - 각종 수사관련 자료 수기 관리 ⇨ 사건, 통계 등 전산관리 / 향후 자치구 보급
  -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8.6.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	222,500	207,000	144,900	93.0%	65.1%	207,000	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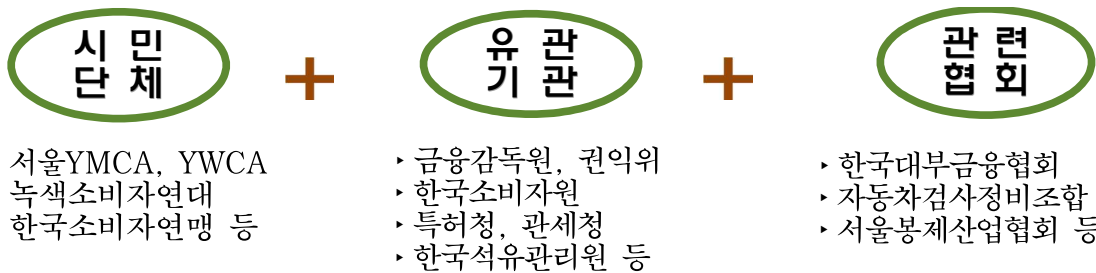
- ◆ 수사직무별 다양한 기관, 단체 등과 협치 수사시스템 구축·운영
- ◆ 자치구·타 광역 시도 특별사법경찰과 민생범죄 대응 공조체계 구축

### □ 그간의 추진내용 및 성과

- 일부 중앙부처 및 자치구 등과 수사협력 및 공조수사 추진('18.1~5)
  -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17.4.19), 식품사범 공조수사 : 65건, 67명 입건
  - 중소벤처기업부·종로구·중구와 위조상품 공조수사 : 2건, 2명 입건
- 시-자치구-통신사 간 협업을 통한 '대포킬러' 프로그램 운영('17.8~)
  -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해당번호를 통화불능 상태로 만드는 프로그램
  - 추진실적('17.8월 ~ '18.5월) : 530건 전화번호 정지

### □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와 시민단체·유관기관·관련협회 등과의 협치 시스템 구축
  - 불법대부·다단계판매 등 민생침해 중요분야 합동단속·공조수사 강화
  - 서울YMCA, 한국소비자원, 자동차검사정비조합 등과 협업 추진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수사 공조시스템 구축·운영
  - 시·구 합동수사 등 공조체계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워크숍 개최
    - ▶ 서울시, 25개 자치구, 검찰청, 자치구 관할 지방검찰청 등 합동
  -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시·자치구 특사경 합동 토론회 개최('18.하반기)
- 17개 '광역 시도' 특별사법경찰 조직간 연계 협업 강화
  - 특사경 상호간 수사지원, 우수 수사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한 수사효율성 제고
    - ▶ 시도 특사경 담당 팀장 참석 1차 회의 개최('18.6.29.), 분기별 회의 개최 추진
  - 광역 시도 특별사법경찰 조직간 행정협의회 운영 검토(협업 성과 등 감안 추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창설 10년차를 맞이하여 민생사법경찰단에 대한 대 시민 홍보 활성화를 통해 민생침해 범죄 척결 및 사전 예방

### □ 그간의 추진내용 및 성과

- 「민생범죄신고 포상금제」 도입·운영('17.4월~)
  - 민생범죄 지능화, 전문화 → 시민신고제도 활성화 필요
  - 2차례 포상금 지급('17.9월, '18.4월) : '감사위원회' 예산 활용
    - ▶ '17.9월 550만원 : 45억원대 불법 다단계업자 검거 기여
    - ▶ '18.4월 2,000만원 : 폐콘크리트 공공수역 무단방류자 검거 기여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민생사범신고** 메뉴 개설('17.5월~)
  - 총 80건 처리 : '17년 57건(5~12월), '18년 23건(1~6월)
    - ※ '앱'과 별도로 市 홈페이지, 120, 방문·우편 신고 등 가능
- 민생사법경찰단 '페이스북' 자체 개설 운영('17.2월~)
  - 민생사법경찰단 소개, 수사결과 보도내용 및 수사사례 전파, 범죄예방 안내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결과 보도자료 제공 등으로 시민피해 및 범죄예방



### □ 향후 추진계획

- 민생사법경찰 10년 성과 및 발전방향 적극 홍보('18.하반기)
  - 수사성과 보도자료, 기획기사, 범죄예방 기고문 제공, 전문가 토론회 등 추진
- 오프라인 홍보매체 활용 민생범죄 예방 홍보 활성화('18.하반기)
  - 리플릿 제작·배포('18.6~7), 지하철 내 포스터('18.8~11) 부착
  - 대포폰 예방 동영상 제작·홍보(유튜브·판도라·네이버·카카오TV 활용 : '18.6월~)
  - 기타 자치구 소식지, 서울사랑 등을 통한 민생사법경찰단 홍보 추진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8.6.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홍보비)	50,000	6,369	6,369	12.7%	12.7%	50,000	100%

## IV. 수사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1.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 사금융 수사
2. 서민 올리는 불법 다단계 수사
3. 주택 불법거래 집중 수사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도모
4. 위조상품 근절로 건전한 시장 유통질서 확립
5. 유해·불법오염 행위 수사로 생활환경 보전
6. 전방위 보건범죄 수사로 시민안전 및 건강 보호
7. 부정·불량 식품 유통사범 척결로 식품 안전성 확보
8. 그린벨트 훼손,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행위 수사
9. 사회복지법인(시설) 수사로 복지재원 집행의 투명성 제고

- ◆ 서민과 취약계층 상대로 법정 이자율(연 24%) 초과하는 고금리 수취, 무등록 불법영업, 불법광고, 불법추심 행위 등 근절
- ※ 대부업 이자율 인하 : 27.9% → 24.0%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18.2.8. 시행)

## □ 사업개요

- 지 명 일 : '15. 8. 26.
- 근거법령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업체현황 : 등록업체 약 2,700개 (※ 무등록 8,800여개 추정)

## □ 주요 추진실적 : 총 9건, 9명 형사입건 ('18.5월말 기준)

-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행위(고금리 이자편취) 수사 : 1건, 1명
- 무등록 불법 대부영업 및 광고행위자 수사 : 8건, 8명
  - 무등록 대부영업 및 고금리 이자편취 : 6건, 6명
  - 무등록 대부중개 : 1건, 1명,    - 불법 명의대여 : 1건, 1명

## □ 향후계획

- 카드깡, 휴대폰깡 등 변종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활동 강화
  - 무가지신문, 도로·전신주 부착 전단지 광고 집중 수거 ⇨ 불법행위 추적
  - 역세권, 먹자골목, 화상경마장 주변 등 탐문(야간, 주말, 출근시간 등)
-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지능적 불법 대부업자 중점수사
  - 온라인 대출중개사이트 광고업체 추적 및 불법행위 상시 모니터링
  - 중개사이트 회원가입 후 불법행위 등 적발(모니터링 결과 적극 활용)

- ◆ 경기둔화 및 구직난 장기화를 이용한 각종 불법 다단계 척결
- ◆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상조업체 위법 행위 적발로 경제적 약자 보호

### □ 사업개요

- 지명일 : '15. 8. 26.
- 근거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업체현황 : 7,262개소(다단계·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7,190 / 상조업 72)

### □ 주요 추진실적 : 총 5건, 14명 형사입건 ('18.5월말 기준)

- 중장년 구직자 대상 취업미끼 불법 다단계업체 : 1건, 6명
  - 사무직 취업을 미끼로 유인하여 팀장승진 조건으로 고가의 제품 구입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다단계 판매영업
- 방문판매법 금지행위 위반 업체 : 1건, 2명
  - 판매원들에게 여행 프로모션 및 현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 지급상한 비율을 초과하여 후원수당 지급
- 해약환급금 미지급, 선수금 미보전 등 불법 상조업체 : 3건, 6명

### □ 향후계획

-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행위 상시 수사(AI 등을 활용한 수사정보 확보)
- 가상화폐, 주식 지급 등으로 소비자 현혹하는 신종 다단계 수사
-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행위 수사

- ◆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전성 확보에 기여함

### □ 사업개요

- 지명일 : '18. 1. 18.
- 근거법령 :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 24,510개 ('18.6월말 현재)

계	공인중개사(개인)	중개법인	중개인 *	비고
24,510	22,497	1,384	629	

\*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 □ 주요 추진실적 : 총 28건, 43명 형사입건 ('18.5월말 기준)

- 청약통장 불법거래 조직 수사
  - 온·오프라인 청약통장 거래광고 확인, 통장모집 브로커 검거
-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중점 수사
  - 수십명의 중개보조원을 두고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중개하는 행위
  - 출입국기록·직장보험 가입여부 분석, 업소 현장확인 등 수사
-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 등 수사
  - 위장전입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채무 위장 미등기 전매행위

### □ 향후계획

-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집값 담합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수사
  - 무자격자와 자격증 보유자의 동업(또는 고용) 형태 '기획부동산' 집중 대상
- '법무사 공증', '복등기' 등 합법을 가장한 신종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수사
- 인터넷 카페를 통한 불법 분양권 전매 행위 수사



- ◆ 중국 등 해외 제작 상품을 국내로 반입, 국산상표를 부착하여 재수출, 판매하는 ‘원산지표시위반’ 행위 및 ‘짜통상품’ 제조·유통 중점 수사

### □ 사업개요

- 지명일 : '12. 4. 18.(상표), '16. 7. 28.(대외무역)
- 근거법령 : 상표법, 대외무역법
- 업체현황 : 32,502개소(동대문 23,624, 남대문 5,667, 명동·이태원 3,211)

### □ 주요 추진실적 : 총 73건, 73명 형사입건 ('18.5월말 기준)

- 외국관광객대상 변형(호객행위, 오피스텔 영업)위조상품 판매 기획수사
  - 명동, 이태원 등 위조상품 유통업자 4명 입건, 1,500여점 압수(정품추정가 11억원)
- 카스, 밴드 등 SNS를 활용한 온라인 판매행위 기획수사
  - SNS 매체를 통한 위조상품 영업사범 사무실 및 보관창고 압수수색, 상표법 위반사범 1명 입건, 위조상품 8,500여점 압수(정품추정가 128억원)
- 공정무역을 위협하는 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수사
  - 동대문, 종로일대 원산지위반(라벨갈이)사범 8명 입건
  - 국내 봉제산업 피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주야간 수사단속 활동 실시
  - 중소벤처기업부·종로구·중구와 협력하여 공조수사

### □ 향후계획

- 관광특구 불법 비밀영업행위 수사로 제조업체 및 대형 유통업자 색출 주력
- 온라인(SNS)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행위 수사 확대 실시
  - 소규모 점포단속 지양, 디지털포렌직 수사를 통한 온라인 유통책 수사 주력
  - SNS를 통한 위조상품 판매사범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시민 참여형 민관협력 수사 공조체계 구축 및 협업 강화
  - 민간협의체(의류협회, 봉제산업협회, 상표대리업체 등) 간담회 실시

- ◆ 시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오염원 관리로 환경오염 사각지대 수사 강화
- ◆ 가짜 석유류 불법유통 및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 수사로 시민안전 확보

## □ 사업개요

- 지명일 : '08.2.21.(환경 32개), '15.8.26.(석유,자동차), '18.1.18.(환경 7개)
-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42개 법률
- 업체현황 : 38,010개소

(단위 : 개소)

구분	대기	수질	폐기물	자동차정비업소	석유판매업
총계	3,805	6,742	22,792	3,832	839

## ○ 수사중점

- 환경오염 위반사범에 대한 선제적 기획수사 ⇒ 계절, 업종, 배출원 등
- 가짜석유제품, 무등록 불법도장 등 집중수사 ⇒ 유통경로 추적, 밀집지역 중점

## □ 주요 추진실적 : 총 92건, 118명 형사입건 ('18.5월말 기준)

- 금속가공 밀집지역 고농도 유해가스 및 위탁폐수 불법배출 : 12건, 12명
- 무등록 자동차 불법도장, 비산먼지 발생 등 대기오염 행위 : 43건, 54명
- 먹는샘물 정보 거짓표시 불법유통, 무등록 방지시설업 영업 : 7건, 16명
- 대형 경유차량에 등유 주유판매, 승인받지 않은 연료 사용 등 : 12건, 13명

## □ 향후계획

- 허가 정비업소 방지시설 미가동 및 노상 불법도장 등 대기오염 행위 수사
- 자동차 휠 내마모성·색상유지 위한 도장, 도금, 세척 등 오염물질 배출행위 수사
- 재활용 폐기물 부적정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상 불법처리 수사

- ◆ 무면허 의료행위, 부정의약품 수사활동 강화로 시민 안전 및 건강 확보
- ◆ 불법 의료기기, 화장품 유통 차단 및 소비자 기만 허위·과대광고 집중수사

### □ 사업개요

- 지 명 일 : '08.2.21.(의약,공중위생), '15.8.26.(화장품,의료기기), '18.1.18.(의료,정신)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약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화장품법, 의료기기관리법, 의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 업체현황 : 65,985개소
  - 의약업소 6,549, 공중위생업소 39,521, 화장품 3,548, 의료기기 16,367

### □ 주요 추진실적 : 총 94건, 133명 형사입건 ('18.5월말 기준)

- 약사법위반 무허가의약품(마취크림) 유통판매사범 수사 : 7건, 7명
-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 위반사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조 수사 : 65건, 67명
  - ※ '17.4.19. 서울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공조수사 관련 MOU 체결
- 일반마스크를 황사마스크인 것처럼 허위 판매한 사범 수사 : 1건, 1명

### □ 향후계획

- 약사법 위반 의약품 불법제조판매, 공중위생관리법 위법행위 기획수사
  - 무허가 무좀·습진약을 제조하여 여름철 특효약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
  - 다이어트, 당뇨 치료, 수험생 기력보강 등 명목의 불법 한방의약품 제조판매 행위
  - 다중이용시설인 숙박, 목욕장업소의 무허가 불법영업 행위
- 의료법 및 정신건강증진법 위반사범 수사
  - 무면허 의료행위, 면허대여, 진료거부, 불법의료기기, 화장품 판매 등 수사
  -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사무장 병원) 수사
  - 정신건강시설내 강제입원행위, 시설 이용자 가혹행위 등 수사

- ◆ 시민 다소비 식품 등 기본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과학적 수사기법 개발을 통한 관례적 부정식품 제조·유통사범 집중 수사

## □ 사업개요

- 지명일 : '08. 2. 21.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
- 업체현황 : 218,895개소

(단위 : 개소)

구분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판매업
총계	167,812	2,049	13,485	23,793	473	11,283

## □ 주요 추진실적 : 총 182건, 193명 형사입건 ('18.5월말 기준)

- 원산지 거짓표시 등 계절 보양식 불량제조업체 수사 : 23건, 25명
- 개인 블로그를 통한 건강식품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수사 : 7건, 7명
- 무신고·무등록 등 식품·원산지분야 고발사건 등 수사 : 152건, 161명

## □ 향후계획

- 유해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유통 행위 중점 수사
  -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
  - 인터넷 등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 지속적 수사
  - 해외직구 수입식품 등의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활동 전개
- 유관기관(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등)과 유기적 협조를 통한 계절별, 테마별 수사활동 확대

- ◆ 시민휴식처 침해하는 그린벨트 위법행위(산림훼손, 계곡점유 등) 엄정 수사
-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유해매체물(성매매 전단지 등) 단속·수사

### □ 사업개요

- 지 명 일 : '10. 11. 22.(개발제한구역), '08. 5. 27.(청소년)
- 근거법령
  - 개발제한구역 분야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청소년 분야 : 청소년보호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개발제한구역 현황 (단위 : km<sup>2</sup>)

구 분	계	서초	강서	노원	은평	강북	도봉	기타
면 적	149.61	23.88	18.92	15.92	12.67	11.67	10.27	56.28
비 율	100%	15.96%	12.65%	10.64%	8.47%	7.80%	6.86%	37.62%

※ 6개구(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영등포, 동작구)는 개발제한구역 없음

### □ 주요 추진실적 ('18.5월말 기준)

- 개발제한구역 분야 위법행위 수사
  - 개발제한구역내 무단 토지형질변경 등 불법 행위자 형사입건(15명)
- 청소년보호 분야 위법행위 수사
  - 성매매 전단지 '살포자 검거'에서 '불법영업 차단'으로 근원적 수사 전환
    - '대포킬러' 프로그램 운영으로 선정성 전단지 전화번호 정지(530건 : '17.8.14~'18.5.30)
  - 청소년대상 담배불법판매 합동 단속 실시('18.5.14~5.17)
    - 시 건강증진과 합동으로 서울소재 24시 편의점 권역별 집중 단속

### □ 향후계획

- 개발제한구역 내 취약지역 악용한 위법행위 중점 수사
  - 산림훼손 행위, 행락철 계곡주변 무단점유 영업행위 등 단속·수사 강화
- 선정성 유해매체물(성매매 전단지) 통화차단으로 제로화 추진
- 유관기관·시민단체 합동 청소년 유해약물(주류 및 담배) 판매 단속

- ◆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기본재산·사업수익 처분·집행 분야 중점수사
- ◆ 그간 관성적 위법행태에 대한 엄정수사로 사회적 경각심 제고

## □ 사업개요

- 지명일 : '18. 1. 18.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현황 : 사회복지 법인·시설(7,993개소, 시비보조금 1조 8천억원)
  - 노인·아동·장애인·한부모가족·청소년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14개 법정시설

## □ 주요 추진실적 : 수사 진행 중 ('18.5월말 기준)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및 사업수익 무단 처분·사용 행위 수사
-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지급단체 파악 등 수사정보 수집 활동 전개

## □ 향후계획

- 규모가 크고 상습 범위반 정황 법인·시설 집중 수사
  - 엄정수사 및 언론보도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및 관련자의 관성적 위법행태 개선 유도
- 유관기관 협조, 의회 지적사항, 언론보도, 기타 민원사항 등을 토대로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 강화
  - 특히 지도·감독 부서와의 합동점검·정보공유로 적시에 범죄인지 및 수사
- 법인(시설) 보조금·사업수익·기본재산의 무단 사용 및 처분 집중 수사
  - 시설장의 법인(시설) 보조금·재산·수익 사적편취를 엄단하여 복지재정 누수 방지
  - ※ 허위종사자를 내세워 인건비(보조금) 편취, 법인 재산 및 사업수익 편취 등



# 201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민생사법경찰단

총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26 건
- 조치내역

	구분	계	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26	21	5		
	시정·처리요구사항	20	18	2		
	건의사항	5	2	3		
	기타(자료제출 등)	1	1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민생사법경찰단의 근무선호도 낮은 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완료</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 전문직위 25개 지정 완료('17.8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 전문관 6명 추가 선발하여 총 13명('18.6월 현재)</li> </ul> </li> <li>○ '17년 시장 표창,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로 수사관 사기진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표창 : 총 27명 수여, 해외연수 : 총 11명 기회제공</li> </ul> </li> <li>○ 직원(남·여) 휴게실 마련 및 헬스장 정비 등 근무환경 및 여건개선으로 근무의욕 고취('17)</li> <li>○ 원활한 수사활동 지원을 위한 수사관 활동복·활동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활동복 2개, 활동화 1개), '18년(활동화 1개)</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에 관심 있는 민생사법경찰단 근무 희망직원 모집('18년 반기별, 시·구 업무계시관 홍보 추진)</li> <li>○ 전문관 확대(현재 13명→'22년 25명 확대), 시장 표창, 해외연수 기회 등 우수 수사인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지속 마련</li> <li>○ 수사비용 현실화를 위한 '치안활동비'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예정</li> <li>○ 수사관 활동복 구입 예정('18년 7월 예정)</li> </ul>
<p>○ 현장 근무 경험이 많지 않고 나이가 어린 변호사(6급)를 외부 채용하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의 조직문화를 해치고 기존 근무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완료</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생사법경찰단 신설에 따른 사법경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범죄수사·사건 소송수행 등 수사법률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변호사를 채용함(행정6급, 4명)</li> <li>※ 변호사 경력직 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한 것으로 나이·성별 등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음</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수사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위주의 법률전문가 대신 전·현직 경찰, 금융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경력자 채용을 검토하고 있는 바, 기존 근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음</li> </ul>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수사관들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충분히 갖추기 바람.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완료</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신용 보호장비 구비(5종/68점) 후 필요시 사용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신용스프레이, 삼단봉, 방검복, 수갑, 포승줄</li> </ul> </li> <li>○ '17.12월 전 수사관 대상 필요장비 수요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조사 결과, 추가적인 보호장비 요청은 없었음</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속탐지기 1대, 불법도청 방지를 위한 회의용 보안장비 12대 등 구매로 수사관 신변 및 개인정보 보호 추진('19.3월 예정)</li> </ul>
<p>○ 민생사법경찰단 직원의 근무기간을 살펴보니, 1년 미만 20명, 1~2년이 22명으로 전체 직원 중 2/3가 재직기간이 2년 미만임. 전문성 확보를 위해 근무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희망근무가 많아지도록 근무환경과 여건을 개선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완료</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 전문직위 25개 지정 완료('17.8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 전문관 6명 추가 선발하여 총 13명('18.6월 현재)</li> </ul> </li> <li>○ 자치구 파견직원의 잦은 인력교체(연45%)에 따른 市 정원 확대 추진 : 시 정원 증원('18.1월) 56명→63명(+7)</li> <li>○ 직원(남·여) 휴게실 마련 및 헬스장 정비 등 근무환경 및 여건개선으로 근무의욕 고취('17)</li> <li>○ 원활한 수사활동 지원을 위한 수사관 활동복·활동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활동복 2개, 활동화 1개), '18년(활동화 1개)</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 전문관 지속 선발 및 확대 추진(현재 13명→'22년 2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 상반기 : 우리단에서 수사실적이 우수한 전문관 4명을 자체 선발하여 인사과에 전문관 지정 요청('18.6.29)</li> <li>- '18년말까지 수사 전문관 20명 선정 추진</li> </ul> </li> <li>○ 수사에 관심 있는 민생사법경찰단 근무 희망직원 모집('18년 반기별, 시·구 업무계시관 홍보 추진)</li> <li>○ 수사관 활동복 구입 예정('18년 7월 예정)</li> </ul>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성매매 전단지 살포를 무의미하게 만든 '대포킬러 프로그램'이 단순히 일회성 전단지 살포 중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파급효과로 이어졌는지 구체적 성과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할 것. (민생수사2반)</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완료</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업자와 통화불능 유도 '대포킬러' 프로그램 개발('17.8.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별 자원봉사자(185명) 및 수사관이 수거한 성매매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3초 간격으로 성매매 영업이 불법이라는 안내멘트를 발신하는 '대포킬러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매매업자와 성매수자간 통화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효과</li> </ul> </li> <li>○ 운영성과 : 성매매전단지 530건 전화번호 정지 조치('18.5월말)</li> <li>○ '대포킬러' 프로그램 횡단전개 : 불법 대부업 전단지에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17.10.10. ~ 계속)</li> </ul> </li> <li>○ 성매매전단지에 악용되는 대포폰 예방 동영상 제작·홍보 (유튜브·판도라·네이버·카카오TV 활용 : '18.6월 ~ 계속)</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단지 전화번호 개설자에 대한 내사로 성매매전단지 발생 예방 지속 추진</li> <li>○ 취약지역 자원봉사자 활동 강화, 우수봉사자 시상 격려</li> </ul>
<p>○ 성과관리계획서 작성과 관련 성과지표에 따른 목표를 평가주기(반기별)에 맞게 목표를 설정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완료</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성과관리계획 수립시 평가주기 및 목표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디지털 수사지원 건수) 평가주기 및 목표치 조정 (변경전 : 연간, 변경후 : 반기별)</li> </ul> </li> <li>○ 2018년 성과관리계획 수립·시행('18.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단속 등 수사사건 송치율' : 91.5%('18.6월까지 80%)</li> <li>- '디지털 수사 지원 건수' : 30건(1분기 4건, 2분기 10건, 3분기 12건, 4분기 4건)</li> </ul> </li> </ul>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민생사법경찰단 운영과 관련 수사관 인력만으로는 범죄를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하철 광고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완료</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결과 등에 대한 수사 보도자료 제공 : 총 43건('17)</li> <li>○ '페이스북' 자체 개설 운영('17.2.) 등 온라인 홍보</li> <li>○ 뉴딜일자리 활용 카드 뉴스 제작 및 홍보</li> <li>○ 홈페이지 및 신고·제보센터 개설 운영('17.2.)</li> <li>○ '서울시 스마트 불편신고' 앱 구축·운영('17.5.)</li> <li>○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마련 시행('17.9.) 등</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구축한 민생신고 앱 등 범죄신고·제보시스템을 통한 시민신고 활성화 추진 강화</li> <li>○ '18년 홍보비 예산(50백만원) 적극 활용, 홍보 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생사법경찰단 홍보 리플릿 제작('18.6~7) 및 배포(시청, 구청, 동주민센터 등 예정)</li> <li>- 지하철 내 민생사법경찰단 홍보 포스터 제작·배포('18.8~11)</li> </ul> </li> <li>○ 유관기관 등 거버넌스 확대를 통한 홍보 활성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자동차검사정비조합' '한국석유관리원' 등</li> </ul> </li> </ul>
<p>○ 민생사법경찰단은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조직이므로 비위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조치를 강구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완료</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민생사법경찰단 전 직원 참여 자체 청렴교육 실시 ('17년 7회)</li> <li>○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기강확립 관리방안 마련시행'('17.3.28)</li> <li>○ '민생사법경찰단 특별 공직기강 확립대책수립'('17.8.17) 등</li> <li>※ 감사담당관 주관 공직기강확립추진실적 평가 장려기관 선정 ('17.12.13.)</li> <li>○ 민생사법경찰단 자체 청렴교육 실시('18.6.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민생사법경찰단 전 직원</li> <li>- 강사 :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 청렴정책 추진계획 지속 추진(직원 교육 등 포함)</li> </ul>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전문관 확대 및 인력 확보를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완료</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 전문직위 25개 지정 완료('17.8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 전문관 6명 추가 선발하여 총 13명('18.6월 현재)</li> <li>- '18년 상반기 : 우리단에서 수사실적이 우수한 전문관 4명을 자체 선발하여 인사과에 전문관 지정 요청('18.6.29)</li> </ul> </li> <li>○ 市 정원 증원('18.1월) : 56명 → 63명(+7)</li> <li>○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17.10월)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원(연말기준) : '18년(75명)→'19년(100명)→'20년(110명)</li> </ul> </li> <li>○ 수사전문가 채용('16) : 변호사(4명), 검·경 출신(1명)</li> <li>○ 교류중(1명) : 식약처 위해중앙수사단</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 전문관 지속 선발 및 확대 추진(현재 13명→'22년 2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말까지 수사 전문관 20명 선정 추진</li> </ul> </li> <li>○ 변호사 위주에서 경찰, 금융전문가 등 채용</li> <li>○ 市 인력 및 조직 유관부서(인사과, 조직과)와 협의하여 수사인력 확대 적극 추진</li> </ul>
<p>○ 자치구에서 파견온 직원들이 열정, 집념, 진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 구축 마련이 필요함.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완료</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실적 우수 자치구 파견직원 市 전입 : '18.1월(1명, 기계8)</li> <li>○ 시장 표창 대상자 선정시 자치구 직원 우선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 시장 표창 인원 : 총 27명(시 7, 자치구 20)</li> </ul> </li> <li>○ '18년 우리단 주요사업 내용으로 시·구간 수사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구별 '민생수사전담팀'(특사경 조직) 신설 추진</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파견직원 시장 표창, 해외연수 우선 추천</li> <li>○ 자치구별 '민생수사전담팀' 신설 완료 이후에는 자치구 파견직원 복귀 시에 해당 자치구에 전담팀 우선 배치를 유도하여 원활한 시·구간 수사협업체계 구축 예정</li> </ul>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업무보고와 관련 수사분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차후에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되도록 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완료</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생범죄 예방 위한 기획수사 강화 : 목표 30건 이상('17)</li> <li>- '17년 기획수사 발표 34건으로 목표 초과달성</li> <li>○ 송치율 목표 : 목표 89.7%→달성 91.4%('17)</li> <li>○ 디지털포렌식 수사 목표 : 목표 12건→달성 13건('17)</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성과관리계획 수립·시행('18. 3월)</li> <li>- '기획단속 등 수사사건 송치율' : 91.5%('18.6월까지 80%)</li> <li>- '디지털 수사 지원 건수' : 30건(1분기 4건, 2분기 10건, 3분기 12건, 4분기 4건)</li> </ul>
<p>○ 민생사법경찰단에서 각종 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데 시의회와 함께 민생사법경찰단 운영에 따른 통합 조례 등을 만들 필요성이 있음. 조속한 추진 바람.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중</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녹화 시스템 장비활용에 관한 매뉴얼 제작('17.3.22.)</li> <li>- 영상녹화 조사 절차·방법, 영상녹화물 생성 및 처리 방법 등</li> <li>○ 市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제정·시행('18.5.3.)</li> <li>- 형식 : 서울특별시예규 제721호, 구성체계(4장·68조·부칙)</li> <li>- 내용 : 수사의 쉰 과정(수사착수~결과공개)에 걸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관 후생복지, 인권 수사 등 조례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고 시의회와 협의 추진하겠음</li> </ul>
<p>○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방검복, 수갑, 포승줄 등 각종 수사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운용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중</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장비 사용 법적근거 마련 요청(대검찰청, '16.10.25)</li> <li>○ 영상녹화 시스템 장비활용에 관한 매뉴얼 제작('17.3.22.)</li> <li>- 영상녹화 조사 절차·방법, 영상녹화물 생성 및 처리 방법 등</li> <li>○ 대검찰청 주최 전국 특사경 운영책임자 워크숍 참석 건의('17.9.22)</li> <li>- 안전한 수사활동을 위한 특사경 장구사용 근거 마련 필요</li> <li>○ 市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제정·시행('18.5.3.)</li> <li>- 同 예규 제20조에서 수갑 등 보호장구 사용근거 규정</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대검찰청 지속 건의·협의 등 추진</li> </ul>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자치구별 수사분야 실적 편차가 크므로 자치구의 협조 및 유기적 협력 강화 방안 마련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완료</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표 등 수사분야별로 자치구별 특수성이 있어 자치구별로 입건건수에 편차가 있음</li> <li>○ 환경, 식품 등 수사분야별 시-구 합동 단속 추진</li> <li>○ 전국 최초 통신프로그램(대포킬러) 개발 자치구 협업으로 성매매 전단지 수거체계 구축 운영 : '17.8.~</li> <li>○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수사를 위한 시·구 특별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일자 : '18.1.19.(금)</li> <li>- 교육대상 : 총 123명(시 82명, 구 35명, 국토부 6명)</li> <li>- 교육내용 :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위한 특사경 지명 요청 안내 및 수사기법 교육 등</li> </ul> </li> <li>○ '18.1월(1.22~1.31, 8일간) 수사기법 교육 등을 위한 市 민생사법경찰단 기본 직무교육시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직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시 : 97명 교육이수, 자치구 11명 교육이수 각각 완료</li> </ul> </li> <li>○ '교통'분야 자치구 특사경 수사 활성화 간담회 개최('18.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대상 : 5개구(종로,성동,중랑,서초,강남), 市 택시물류과 등</li> <li>- 회의내용 : 무보험 운행차량 자치구 수사실태 및 애로사항 청취 등</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분야별 시-구 공조수사 강화, 공동 교육 지속 추진, 자치구 요청시 수사인력 및 각종 수사장비 지원 예정</li> </ul>
<p>○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12월에 집중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 예산 편성시 필요한 수사 장비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적기적소에 집행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완료</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수사장비(압수용 냉동고)예산 상반기 집행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5,000천원→집행 4,670원('17.5월)</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장비 예산 적시 집행으로 효율적인 수사활동 지원</li> </ul>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민생사법경찰단 수당 반납과 관련 반납 전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민생 사법경찰단의 특수성을 생각 해서 더 이상의 부당수령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 수당에 관한 철저한 관리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 기준에 따라 선 지급한 수당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인사 발령 등 변동에 따른 정산으로 환수금액 발생</li> <li>○ 수당지급 관련규정 전 직원 공유 및 급여 담당 교육 강화</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납 사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산 실시</li> <li>○ 부당수령 방지 교육 및 지급내역 정기 모니터링</li> </ul>
<p>○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시정 여론 조사 방식을 온라인 여론 조사 보다는 정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으로 시민 의견을 파악하도록 보완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밀한 여론조사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 : '17.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뢰기관 : (사)한국정책학회('17.9.1~9.30)</li> <li>- 조사대상 : 총1,021명(시민 531명, 국가경찰 346명, 제주자치경찰 100명, 교수 등 전문가 44명)</li> <li>- 조사방법 : 객관식 자기기입식 설문조사</li> </ul> </li> <li>○ 설문조사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응답자의 70.6% 자치경찰 도입 찬성</li> <li>- 전체 응답자의 78.1%가 자치경찰제 시행시 치안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응답 등</li> </ul> </li> <li>○ 자치경찰 용역결과 발표 완료('18.2.6)</li> </ul>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자치경찰시민회의(TF) 구성과 관련하여, 특정지역의 인물이 과다 참여함으로써 구성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하였음. 보완하기 바람. 특히, 2017년도 예산에 미반영 되었음에도, 특정 예산에서 변경하여 사용한 것은 매우 부적절 하므로 개선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5월 출범한 새 정부의 공약사업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 포함되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예산변경을 실시함</li> <li>○ 자치경찰시민회의는 관련연구 교수, 주민단체, 전문가 등 총 22명으로 구성('17.8.31. 출범).</li> <li>○ 위원 구성시 자치경찰제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경찰행정학과·법학과 등 교수진이 10명 포함됨</li> <li>○ 자치경찰 용역결과 발표 완료('18.2.6)</li> </ul>
<p>○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포괄 예산에서 지원 받아 집행했음에도 의회에 미보고 하였음. 주의가 필요함.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생사범경찰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특사경 발전방안 및 자치경찰제 모델 구상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1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재배정(4천만원)받아 집행(약 32,272천원)</li> </ul> </li> <li>○ 자치경찰 용역결과 발표 완료('18.2.6)</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업무처리시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겠음</li> </ul>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불법 다단계 등 방문 판매 수사와 관련하여, 정보 입수가 시민 제보에만 의존하고, 수사 정보 수집에 미흡한 점이 많음. 또한, 바르게 살기 추진위원회 등 자치구와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완료</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분야별 민간협의체, 유관기관 참여 공조수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무협약 체결('17.4.19) 공조수사</li> <li>-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과 가짜 석유 등 공조수사</li> <li>-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등 검사의뢰</li> </ul> </li> <li>○ 성매매업자와 통화불능 유도하는 '대포킬러' 운영('1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자치구(21), 이동통신사(KT, LG U+, SK텔레콤)</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단체·유관기관·관련협회 등과 협치 시스템 지속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대부·다단계 등 민생침해 중요분야 합동단속·공조수사 강화</li> <li>- 서울YMCA, 한국소비자원, 자동차검사정비조합 등과 협업 추진</li> </ul> </li> <li>○ 인공지능(AI) 활용 '사이버수사 정보체계' 구축('18.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SNS 등 사이버 상에 가짜 뉴스 등의 교묘한 수법으로 전파되고 있는 민생침해 관련 범죄 정보를 색출하여 수사정보 활용</li> </ul> </li> </ul>

# 건의 사항

건의 사항	조치 결과
<p>○ 원활한 범죄정보 수집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 신고에 참여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완료</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신고 시스템 간편화 및 신고체계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17. 2월~) 및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17. 5월~) 운영</li> <li>- 민생사법경찰단 페이스북 운영 및 신고방안 홍보 카드뉴스 게재('17.2월~)</li> </ul> </li> <li>○ 민생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17.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다단계신고자 550만원 지급('17.9월)</li> <li>- 폐콘크리트 공공수역 무단방류 신고자 2,000만원 지급('18.4월)</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결과 언론보도 등 통해 민사단 시민 인지도 제고</li> <li>○ 홈페이지, 앱, 페이스북 등 SNS 운영 강화로 시민 신고 활성화</li> <li>○ 민생사법경찰단 홍보 리플릿('18.6~7 제작 및 배포 예정)에 민생범죄 신고 내용 및 방법 안내</li> </ul>
<p>○ 최근의 범치는 인터넷상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방향도 사이버범죄 및 수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중</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SNS 등 사이버 상에 포출된 범죄정보 수집 활동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불법대부, 고리대금,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 대상 집중</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지능(AI) 활용 '사이버수사 정보체계' 구축('18.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SNS 등 사이버 상에 가짜 뉴스 등의 교묘한 수법으로 전파되고 있는 민생침해 관련 범죄 정보를 색출하여 수사정보 활용</li> </ul> </li> </ul>

건의사항	조치결과
<p>○ 특사경 수사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필수보직기간 확대 및 전문관 운영 인력 확대가 필요하며 경찰·소방·교육공무원처럼 특화할 필요가 있음.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보직기간 확대기관 지정요청’ 공문시행(’1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보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운영</li> </ul> </li> <li>○ 수사 전문직위 25개 지정 완료(’17.8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 전문관 6명 추가 선발하여 총 13명(’18.6월 현재)</li> <li>- ’18년 상반기 : 우리단에서 수사실적이 우수한 전문관 4명을 자체 선발하여 인사과에 전문관 지정 요청(’18.6.29)</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보직기간 확대기관 지정’ 지속 협의(인사과)</li> <li>○ 수사 전문관 지속 선발 및 확대 추진(현재 13명→’22년 2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말까지 수사 전문관 20명 선정 추진</li> </ul> </li> </ul>
<p>○ 건축물 신축 준공검사 후에 불법 증축하고 임대하는 사례 등이 횡행하는데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사경 도입 필요성 등 직무범위 확대 방안 적극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을 추가하는 개정안 발의(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17.11.20.)</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등을 위해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 추진</li> </ul>
<p>○ 청소년성매매 전단지 불법 영업 차단과 관련 제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인터넷상 도박까지도 직무범위 확대하면 좋겠음. 민생사법경찰단에서도 청소년 인터넷도박이나 사이버범죄 관련 분야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명을 받기 위해 노력바람.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사법경찰은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제도임</li> <li>○ 도박죄 등은 「형법」에서 규정된 범죄로 ’18.6월 현재까지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직무범위는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범죄에 한정되어 있음</li> </ul> </li> <li>○ 도박죄 등은 형사범으로써 일반사법경찰이 「형법」에 따라 수사를 처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분야에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사법경찰은 행정법규를 위반한 행정범을 수사하는 것이 「사법경찰직무법」의 취지에 보다 부합함</li> </ul> </li> </ul>

#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자치경찰 학술용역 중간보고서 및 용역 관련 예산 자료 (민생수사1반)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학술용역 최종보고서 제출('18. 2월) -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재배정(4천만원)받아 집행(약 32,272천원)